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PSI 참여 관련 제언

코리아연구원(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 I.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배경 및 의미
- II. 장거리 로켓에 대한 국제적 대응 분석
- III. 향후 6자회담 및 북미관계 전망
- IV. 한국의 PSI 참여 문제에 대한 분석
- V.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

I.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배경 및 의미

1) 장거리 로켓 발사의 배경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의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김정일 3기체제 출범을 계기로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대내정치적 배경을 들 수 있다. 둘째, 남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의 의미보다는 새로 출범한 오바마정부에 대한 기선제압 의미로 대미 협상에서의 위상 강화 목적이 있다. 세번째로 과거 98년과 2006년 실패를 극복한 기술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외 판매를 목적으로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2) 로켓 발사의 의미

이번 로켓 발사는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거리 발사 능력 증대는 확인되었다. 특히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면에서 지난 2월에 발사된 이란의 소형 샤피르 로켓보다 기술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오는 7월 남한이 발사하기로 한 KSLV-1과 동급인 100kg 정도의 탄두 중량을 탑재할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위성을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상당시간이 걸려야 ICBM급(대륙간 탄도탄)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I. 장거리 로켓에 대한 국제적 대응 분석

1) 국제적 대응에 대한 분석

한·미·일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을 이유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채택을 요구하였으나, 중·러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 인정을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여 결국 제재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4월 13일 발표된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에 대해 “안보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유념한다. 안보리는 안보리결의 1718호를 위반한 북한의 2009년 4월 5일(한국시간) 발사를 규탄한다” 고 상당히 강하고 단호한 입장을 담았다. 비록 의장성명은 구속력이 없으나, 이번에 발표된 것은 제재 수준을 넘어서 실제 이행 조치를 담고 있어 향후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2) 향후 관련국들의 대응

미국은 대북 직접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의장성명 채택 후, 이행 조치를 해나가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핵테러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적 협력 및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시정부 때의 대북제재 조치로 회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은 이미 대북제재 연장을 발표하였고, 북의 로켓발사로 현재까지 대내정치적 효과를 크게 보았기 때문에 바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러는 의장성명 이후 더 이상의 제재조치를 위한 의미있는 조정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III. 향후 6자회담 및 북미관계 전망

북한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대해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여 정상가동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이 깨끗이 재처리될 것이다" 고 밝혔다. 또한 IAEA 감시검증팀의 추방, 모든 핵시설의 봉인을 제거, 모든 감시카메라도 끄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는 것을 볼 때 상당기간 동안 6자회담의 중단은 불가피하며, 결국은 북·미 양자회담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14일 방미중인 일본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이 최선의 길이라는 하나 적당한 때가 되면 북·미 직접대화에도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북한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것이며, 북한제재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망라한 포괄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결국 향후 논의의 수순은 안보리 조치 관련 상호비난→ 상당기간의 북·미간 탐색→ 북·미간 본격협상 돌입→ 협상의 모양새 내지 결과 추인 위한 6자회담 재개의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IV. 한국의 PSI 참여 문제에 대한 분석

1) PSI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 분석

PSI는 2003년 5월 출범한 체제로 현재 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2004.5) 후속대책, 핵반출규제조치(NSOI) 등과 더불어 WMD 대확산조치로서 추진되고 있다. PSI는 영해뿐 아니라 접속수역, 나아가 공해상에 이르기까지 WMD 운반 의심 선박이나 항공기를 직접 검색하겠다는 목표 하에 국제규범화를 추구하고 있다. 다만, PSI는 애초부터 유엔해양법협약체계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 이후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됐으나 2006년 불탄 국무차관 사임 후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오바마 정부의 PSI에 대한 입장은 ‘오바마-바이든플랜’에서 “제도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구체적 추진 내용이 주목된다. 또한 미국은 2006년 한국의 PSI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한국의 전면적 참여 유보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는 외교관계 및 국제적 합의를 중시하여 PSI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오바마정부의 입장과 꼭 맞아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2) PSI 참여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현재 남북 간에는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경협 합의에 따라 연간 수천 건 이상 사전신고·통신·검색 및 규제조치들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한은 양국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러나 만일 한국이 PSI 참여를 하게 된다면 한국 영해를 지나는 북한 선박에 대하여 미국이 검색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북한이 불응하게 될 경우 한국 영해 상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PSI 참여로 인해 중국의 미사일 수출도 검색대상이 되므로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관련 예산의 추가적인 소요와 대응체계 마련 등 준비부족 문제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V.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향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번 국면은 남북간 군사대립의 문제는 아니며, 대외적으로 북·미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국제 사회의 대응은 위기를 진정시키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만이 가진 전략적 자산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비핵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 핵심 목표를 추구하는 데 정책적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한 대미 협상, 군비증강 등 강경 대책을 채택할 경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안보 및 경제전반에 심각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견되므로 PSI 전면 참여 대신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를 유지하면서 국제 대확산 협력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위기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파국적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NLL 등에서의 남북 간 군사력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사력의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등 최소한의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남북 상생을 위한 완충지대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모색해야 한다.
(2009/04/17)



※코리아연구원은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회비 및 기부금으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와 전화(02-733-3348)로 후원 및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